

국내뉴스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단계별 적용 해당 농가, 2024년까지 유예 가능

환경부가 최근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을 유예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의 기준을 '무허가 면적'으로 하되, 면적 규모별로 달리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8·2019년 3월24일까지 각각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1·2단계 적법화 대상 시설은 현행대로 '무허가'와 '허가' 면적을 더해 산출한 전체 시설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되는 3단계는 '무허가 면적'만 대상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축산업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적법화 대상 시설 기준이 '축사 전체'라는 정부의 견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민신문 6월 16일]

무허가축사 대책 촉구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

농협경제제주 축산경제와 전국의 축협들이 무허가축사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갖고 무허가축사, 청탁금지법, 쇠고기 이력제 예산 확대 등 축산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의 농협중앙회 회원 가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날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최근 다시 발생한 시, 무허가축사, 부정청탁법 등 축산 관련 현안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6월 20일]

우유지급률 '뚝뚝'...대책 절실

우리나라의 우유 지급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제품 소비 추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유소비 감소와 유제품 수입 증가에 따른 지급률이 떨어지고 무허가축사 문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5년 뒤 대부분의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낙농의 생산기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낙농제도개혁을 통해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낙농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6월 14일]

FTA, 농가는 피해·유가공업계는 편익컸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은 '낙농·유가공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FTA 피해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낙농가들에게는 연평균 약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가공업계는 피해와 편익이 동시에 발생했다. 연구팀은 "관세율 인하로 국내 유가공업계와 식품제조업계에는 큰 편익이 발생했으며, 이익 금액은 약 3천580억~3천65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국산 유제품 지급률 설정과 가공원료유지원 사업 강화 ▲낙농분야 정부 예산 증액 필요 ▲전국단위 쿼터제,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선 ▲시유 및 유제품 소비 확대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축산신문 6월 23일]

학교 우유급식 전국 활성화 시도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달 26일 인천시와 부산시에 학교우유급식 미실시교 대상 행정지도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의 학교우유급식률은 '15년도 기준 각각 19.1%, 20.3%로 전국 평균(51.1%)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해에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건의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재차 건의에 나선 것이다. 이승호 회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학교우유급식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경제 6월 2일]

학교우유급식 의무화 이슈로

학교우유급식 의무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는 지난 6일 하루 간 ‘학교 우유급식 전면시행...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는 8494명이 응답한 가운데 긍정이 4728표, 부정 3603표, 기타 의견이 163표로 집계됐다.

[축산경제 6월 9일]

올해 원유 생산량 지난해와 비슷할 듯

올해 원유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원유 생산량은 88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만2천톤) 대비 0.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유 사용량은 78만9천톤으로 지난해(79만5천톤) 대비 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 재고량은 4월말 기준 1만2천57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가 줄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생산량이 계절적인 영향으로 5월 이후 하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총 생산량은 207만4천톤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총 생산량 206만9천톤에 비해 0.2%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6월 21일]

‘송아지 허위 출생신고’ 집중 단속

정부가 소 사육단계에서 발생하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 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방역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소를 키우는 농가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은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된다.

[농민신문 6월 19일]